

# 전주시의회 5분발언... 시정 현안 정책 대안 제시

###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도입 통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 전주~세종 간 교통망 국가계획 반영 등 제안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도입을 통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에너지 생산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전주시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시민 참여형 사업 모델 도입 등으로 공공시설 수익이 전주시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세종 간 교통망 국가계획 반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호남권 주민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주말마다 좌석 경쟁과 민성적인 불편

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전남도, 광주광역시,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에 대해 협의했고, 국회는 전주시와 세종시를 경유하는 호남고속도로를 우선순위로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와 한반도 KTX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은 전주를 영화 상영 도시에서 제작 중심 도시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전주는 영화상영 중심 도시로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영화제작 중심 도시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제작 기업 유치와 AI 기술 융합,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허브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미 의원(효자2·3·4동)은 효자동 우립교 경관시설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해색 논란과 경관

훼손 문제를 초래한 현재의 시설은 시민 정서와 괴리돼 있다"며 "교량을 전략적 관광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제 도입을 통해 경관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혜정 의원(우아·1, 2, 호성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충을 제안했다. 은 의원은 "미세먼지와 폭염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아이들의 놀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의 단계적 확충으로 일상적 놀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서원시니어 클럽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입대료 부담과 시설 노후화로 운영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며 "(전)금안2동 주민센터로의 이전 방안을 마련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통한 서원시니어클럽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장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 환자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의 정책은 중증 환자에 집중되어 있어 경증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크다"며 "치매안심마을 또는 생활권 단위 거점을 중심으로 경증 치매 특화 프로그램 도입과 장기요양 등급 이전 단계 지원, 돌봄 중심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은 생활폐기물 위탁 행정의 부실성을 지적하며 책임 행정 구현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위탁업체의 무단 반출 및 사업 중단 등은 행정의 관리 감독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스톱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책임 행정 구현을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산하기관 차량 5부제 시행

### 중동지역 정세 불안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선제 대응

전주시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5일 0시부터 '전주시 및 산하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행 대상은 전주시 및 산하기관 소속 전 직원 차량으로, △장애인 사용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매주 수요일 대중교통(버스) 이용의 날 운영 △간부공무원 승선수범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분담금 인상 △시민 중심의 청사 주차장 운영 △대중교통 적극 동참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쁨의하우스, 업무협약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5일 위기청소년과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위기임산부지역상담기관인 '기쁨의하우스' (원장 정영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심리·정서 지원 △긴급 보호 및 생활 안정 지원 △자립 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호 협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정서적 어려움과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겪는 청소년과 임산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

# 지역업체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전주시, 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가져

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건설 공사 참여도에 따라 과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의 지평도를 바꾸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전북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수 건설안전국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지역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전기·소방·설계 등 건설 관련 협회장단이 참석해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새롭게 제정하고, 전주시의회 역시 관련 토론회 개최와 지속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침과의 연계를 토대로 전주시 실정에 최적화된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상 독점해 온 아파트 건설 시장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는 기존에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미흡했던

지역 자체 사용과 하도급 참여를 '용적률 인센티브'와 '의무비율 제도'를 통해 강제성을 띤 강력한 혜택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 △설계용역업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의 총 5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는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 분야 항목을 총공사비 비율로 일반화하고, 지역 내 건설자재와 장비 항목을 통합해 건설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법제 심사 등 예규 입안 절차를 마무리

하고, 오는 4월 내에는 개정된 지침을 최종 확정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8기 도시계획규제 완화 기초에 발맞춰 용적률 체계도 보완 정비했다.

주거지역은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을 유지하되, 주차장이나 완충녹지 확보 등 공공 기여 시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을 종전보다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번 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정연구원과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총 8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와 전주시의회 및 건설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침과 연계해 우리 시 실정에 최적화된 이번 개정 지침이 지역 건설산업의 동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청년희망단원 대상 현장 방문 교육 실시

전주시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원들이 주요 시정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인 청년 정책을 구상했다.

전주시는 25일 제10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단원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청년희망단은 소담스퀘어 전주와 전주첨단벤처단지 등 창업·일자

리 관련 주요 기관을 비롯해 이종호수도서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참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친화적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년희망단은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한 전주시 대표 청년참여기구로, 제10기 단원들은 △기회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매달 정기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